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기자회견문

2026년 7월 1일 배포 | 지부장 신명균 | 대표전화 054)278-1339 | 담당 : 포항지부 김영건 조직국장 010-4077-5191

<5월 18일자 금속노조 조합원 집단 정리해고 통보>

대놓고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 방관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네이처이앤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눈감은 노동부, 경북지노위는 법과 상식에 따라 부당해고 인정하라!

수조원대 알짜배기 사업권 따내고도 1,500억원 공사비로 경영위기?

지난 5월 18일 네이처이앤티는 8명의 금속노조 조합원을 해고했다. 회사는 매립장 안정화 사업 공사비용 1,500억원 때문에 경영위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 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회사가 스스로 포항시에 제안해 이뤄지는 것으로 이후 870만㎥ 규모의 신규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회사는 스스로 제안하고, 포항의 시민·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밀어붙여 얻어낸 사업을 두고 경영상의 위기라 하며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신고제라는 이유로 이를 막지 못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백지화하면 그만인 사업을 진행하느라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회사의 설명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다.

말도 안되는 정리해고, 노동부는 막을 힘이 없다 한다.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지서를 받고 노동부로 달려간 노동자들에게 노동부 감독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알려줄 뿐이었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정리해고지만 근로기준법, 노조법 어디를 봐도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된 이후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구제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만 있을 뿐이다. 초심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재심을 청구하고, 이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난 채 몇 년을 보내야 할지 기약이 없다. 작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나선 회사의 정리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편이 아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상 협의 의무, 자료제공의무 등을 보란 듯이 무시한채 막무가내로 정리해고를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노동부 감독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달라지는건 없었다. 감독관은 정리해고 절차의 위법성은 확인되었지만 회사의 답변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전달만 할 뿐 정리해고를 막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요구한 네이처이앤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복직 투쟁 과정에서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

해고 이후 복직 투쟁 과정에서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었다. 해고 노동자의 회사 출입은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회사는 해고노동자들의 차량 등록을 삭제하고, 방문객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노동자들을 핍박했다. 노조법과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조합원의 출입을 사무직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정문을 걸어잠그고 막아섰다. 금속노조의 요청으로 현장에 나온 감독관은 회사의 노조법, 단협 위반을 지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부 상근간부에게 고성을 지르는 상식밖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경북지노위는 법과 상식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라.

네이처이앤티의 정리해고는 불법으로 가득하다. 앞서 말했듯 경영상의 위기는 수조원 수익을 위한 투자일 뿐이고, 회사가 보유한 해외 주식, 비트코인ETF 등 투자 자산은 물론이고, 부동산 등 회사 자산 어느 하나 매각하지도 않은채 3개월치 임금을 조건으로 몇차례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해고회피노력을 했다 주장한다. 단협상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무시한채 곧 임원 승진을 앞둔 부장을 근로자대표로 세워 짜맞추기식 협의를 진행하고는 공정한 해고 기준 따위는 마련할 생각조차 않은채 금속노조 조합원만 콕 집어 해고했다. 법과 상식이 지켜진다면 마땅히 경북지노위는 네이처이앤티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해야 한다.

대구 고용노동청과 경북지노위에 요구한다.

하나, 불법을 일삼는 네이처이앤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노조 파괴 범죄자 배민수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하나, 법과 상식 위에서 네이처이앤티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라!
하나, 위법한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사업주를 처벌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6년 7월 1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일동